

올해 車 산업에 4645억 투입

자율주행·전기차 기술개발 ‘총력’

산업부, R&D·기반구축 사업 공고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등 중점 육성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확대하기로

정부가 올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총 4645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R&D) 및 기반구축 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자동차 분야 R&D에는 총 3827억 원이 배정되며, 이 가운데 1044억 원은 44개 신규 과제에 투입된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72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3년 연속 700억 달러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했지만,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 진화, 친환경 규제 강화로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기존 플랫폼 방식에서 벗어나 E2E(End-to-End) AI 자율주행으로의 기술 전환에 대응한다. 산업부는 495억 원 규모로 14개 신규 과제를 지원해 멀티모달 기반 상황인지 기술, 국가표준 기반 SDV 시스템, 오픈소스 기반 AI-SDV 플랫폼,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등을 중점 육성한다. 완성차·부품·소프트웨어·AI 기업 70여 개가 참여하는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AI 미래차 조기 상용화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분야에는 548억 원을



산업통상부가 올해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 등에 4645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

투입해 30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질화갈륨(GaN) 기반 고집적 전력변환 시스템, 차체 일체형 배터리 시스템(CTC), 1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구동 시스템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또 세계 시장에서 승용차 대비 경쟁력이 다소 부족한 상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액체수소 저장시스템을 적용한 대형 수소트럭과 수소엔진 기반 상용차, 상용차용 하중 분산용 구동기(액추에이터) 국산화 등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R&D 성과의 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연계형’ 기술개발도 확대한다. 지방정부와 지역 기업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2개 과제에 70억 원을 지원하고, 연구성과물을 지방정부의 공공차량 수요와 연계해 실증과 구매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부품기업 밀착 지원을 위해 기반구축 사업에도 818억 원을 투입한다.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에 따라 지역 거점별 특화 전략을 반영한 신규 기반구축 사업 7개(116억 원)가 새로 추진된다.

이날 공고된 신규과제 중 R&D는 산업기술 R&D 연구자 지원 시스템(srome.keit.re.kr), 기반구축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상세내용과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규제 강화 속에 기술·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미래차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미래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I 탑재한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하고 답변

권익위, 4개 기관 시범 운영
빈발·중복 민원 일괄 처리

국민신문고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처리·분석 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민원의 맥락과 의미를 AI가 이해해 답변을 추천하고, 유사 민원을 묶어 처리하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의 일환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국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국민신문고’ 서비스 개시를 알리며 주요 추진 내용과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익위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7

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됐다. 핵심 기능은 ▲AI 민원답변 추천 ▲빈발·중복 민원 일괄 처리 ▲AI 기반 민원 분석 등이다.

이번에 개시되는 AI 서비스는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4개 시범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AI 민원답변 추천’ 서비스가 제공된다. AI가 관련 법령과 기존 민원 사례, 업무 매뉴얼 등을 분석해 답변 초안을 제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검토·보완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배달 오토바이 전기로 바꾼다

10년 내 전기 60%·내연 40%로

정부가 향후 5년 내 배달업계 전기 오토바이 보급 비중을 25%까지 끌어 올린다. 신규등록 4대 중 1대는 전기 오토바이로 대체한다는 것. 또 10년

뒤 배달오토바이 구성비 목표를 전기 모터 60%·내연기관엔진 40%로 설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달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연과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정책 목표를 내걸고, 관련 업

계와 보급 확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새로 신고된 오토바이(배달용 포함) 총 10만4848대 중 전기오토바이 비중은 9.7%(1만137대) 수준이다. 90% 이상이 내연 방식의 엔진이다.

기후부는 이날 경기 하남 소재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주요 업체와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청정바다 위해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해수부, 어구관리 기록제 등 신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어구 관리 기록제 및 유실어구 신고제가 신설된다. 아울러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 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기본계획(2021~2030)’의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새롭게 추가해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변경계획수립에 앞서 해수부는 먼저 해양폐기물 관리의 기초가 되는 최근 7년간(2018~2024년) 해양폐기물 발생량

을 연도별로 추정했다. 2019년 8만6000톤(t)부터 2023년 18만4000t까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해양폐기물 발생량 변동 상황과 국제적 의제 대응 필요성 증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우선 주요 발생원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시설도 늘린다.

또 최근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 외국에서 밀려온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협의의 시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KIAT, 20억 투입해 소·부·장 맞춤 지원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등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3대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술 애로 해소부터 양산 성능 검증, 제품 신뢰성 확보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이다.

KIAT는 5일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공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 애로를 공공연구소가 멘토링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KIAT는 올해 총 14개 과제에 약 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부장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돕기 위해 심화기술지원 AX 분야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시제품 개발 이후 실제 수요처 납품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급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요기업의 생산 라인에서 제품 성능을 직접 평가·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6년 신규 예산은 총 229억 원이며, 디지털 복제물(디지털 트윈)을 구축·활용한 성능 평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은 소부장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해 제품 신뢰성 향상에 필요한 시험·검사·분석 서비스를 연구개발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속·화학·섬유·세라믹전자·기계자동차 등 5개 분야, 36개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 “우리 농산물 적극 소비해 달라”

〈농림식품부 장관〉

한식문화공간 찾아 선물세트 홍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리 농식품으로 꾸러진 명절 선물세트 홍보에 직접 나섰다. 그는 5일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찾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이 이날 현장에서 살핀 ‘설빔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는 농업의 가치를 담고 있다. 프리미엄과 신뢰, 상생, 도전을 주제로 엄선된 5개 카테고리·30개 제품으로 구성된다. ▲콩 가공제품 ▲청년 생산제품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곡물 등이다.

특히, 판로 확대를 모색 중인 콩 가공제품과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비롯해 농가와의 상생과 미래 농업의 비전을 함께 담아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과 품평회로 우수성이 검증된 우리술을 엄선해



송미령(왼쪽 2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방문해 국내산 농식품으로 구성된 설 선물세트를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명절 선물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였다.

송 장관은 현장을 둘러본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생산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설빔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 선택은 단순한 선물을 넘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각 기관과 단체에서도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